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2022. 12. 6.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목 차

- ▶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
- ▶ 최근의 조세정책 평가와 정책방향
 - 세수입의 충분성
 - 효율성
 - 공평성, 단순성, 투명성
 - 형평성
 - 그 외 조세정책 이슈

첫번째 이슈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

세수입 확보, 효율성

▶ 세수입 확보

- 조세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의 세수입 확보
 - 국가부채, 재정적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세수입 확보

▶ 효율성(efficiency)

-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시장에서의 자원배분 왜곡) 최소화
- 조세회피 및 탈세 최소화
- 정책 방향
 - 경제활동(소비, 소득창출)의 최종단계에서 과세 : 부가가치세(O), (개인)소득세 (O), 법인세 (X)
 - 이동성이 낮은 세원에 대해 과세 : 재산과세(O), 부가가치세(O), (개인)소득세(Δ), 법인세 (X)
 -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 : 조세특례 (X), 비과세 (X), 차등세율 또는 다단계 세율 (X)
- 저개발국은 세원 관리가 용이한 법인세 의존도 높은 편 - 비효율적

공평성, 형평성

▶ 공평성(fairness, horizontal equity)

- 경제 상황(소득, 소비, 재산 등)이 동등한 납세자는 동등하게 취급
- 조세회피 축소, 납세의식 제고, 정부 신뢰 확보에 중요
- 정책 방향
 -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 : 조세특례, 비과세, 다단계 세율체계 최소화
 - 엄정한 행정으로 조세회피, 탈세 최소화

▶ 형평성(vertical equity)

-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 정책 방향
 - 소득세 누진세율체계,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제도
 - 재정지출(보조금 등)과의 조화 필요
 - 조세-혜택 분석(tax-benefit analysis)을 기반으로 조세정책 수립
 - 중간단계 과세(법인세)를 통한 재분배 지양

투명성 및 단순성

▶ 투명성 및 단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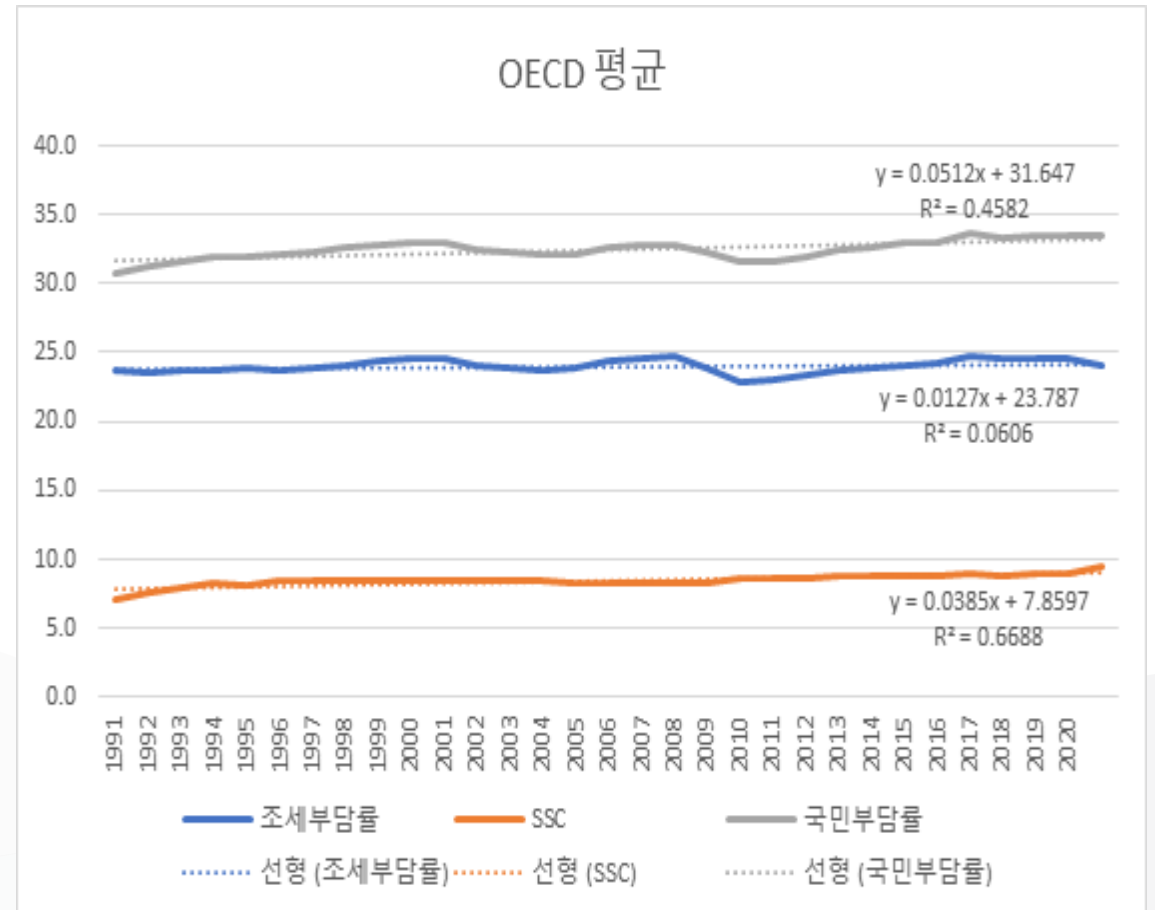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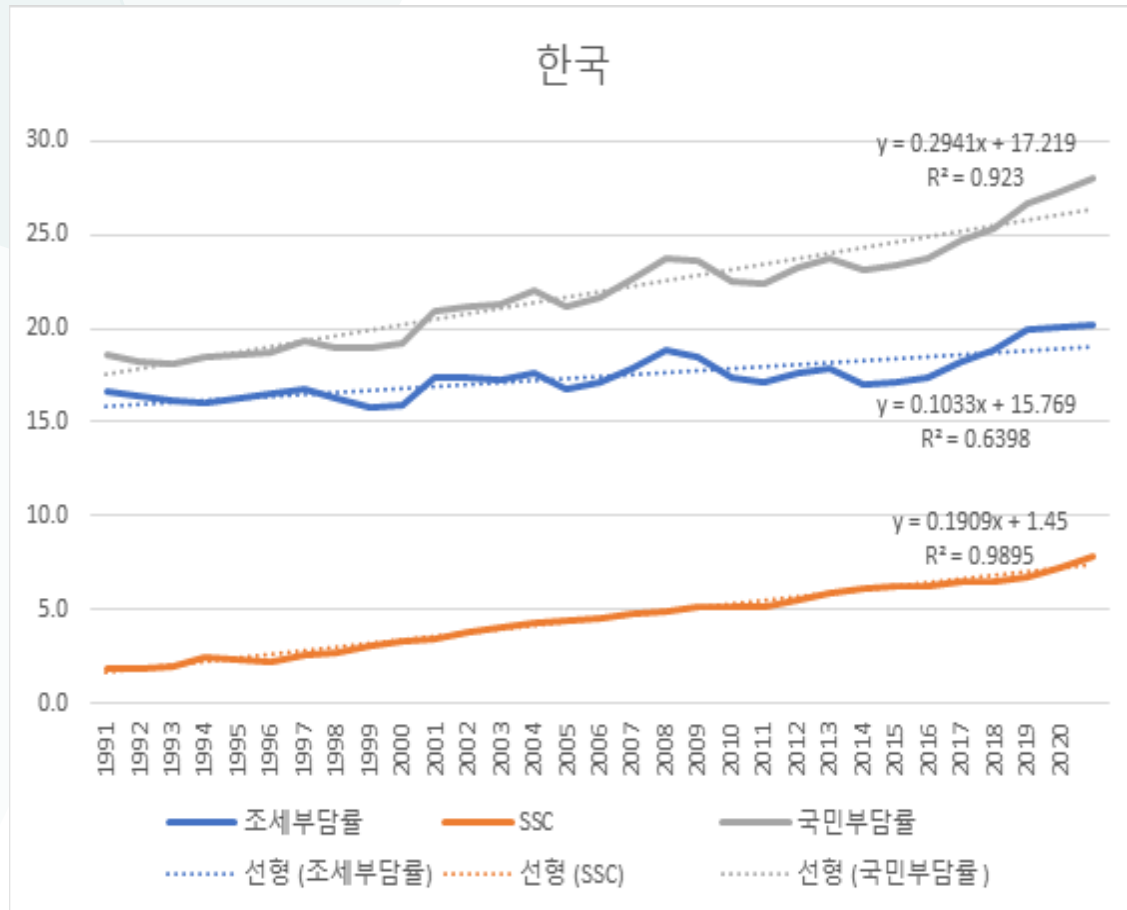
-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세제
- 제도의 해석이 투명한 세제
- 행정이 간편한 세제
- 납세의식 제고, 정부신뢰 확보에 중요한 영향
- 정책 방향
 -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 : 조세특례, 비과세, 다단계 세율체계 최소화

두번째 이슈

최근의 조세정책 평가와 시사점

- (1) 세수입의 충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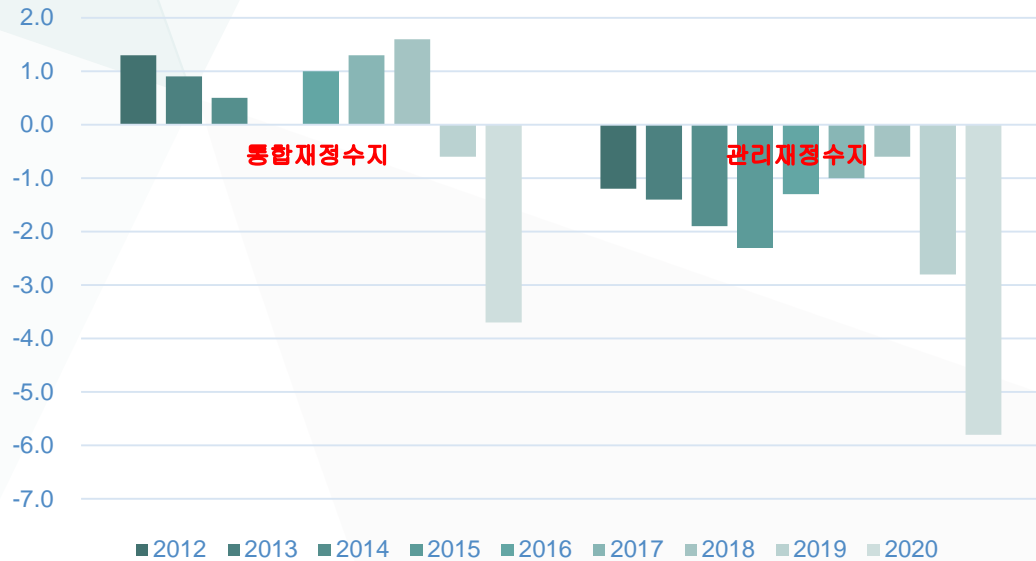
(1) 조세 및 국민 부담률 - 변화 추이



재정수지와 부담률의 국제비교

▶ 재정수요에 비해 부담률이 낮은 편

- 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



▶ 부담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

- 조세, 국민부담률(2020년, %)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평균
조세부담률	20.1	24.1	83.6
사회보험료	7.8	9.4	83.3
국민부담률	28.0	33.5	83.5

장기재정수지 전망(NABO) (단위: 조원, %)

	2020 ¹⁾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39.2 (22.7)	589.7 (24.5)	675.8 (24.2)	733.5 (23.4)	771.6 (22.6)	817.5 (22.4)	1.3
총지출 (GDP 대비 비율)	550.3 (28.4)	670.7 (27.8)	826.4 (29.5)	979.9 (31.2)	1,109.8 (32.5)	1,216.1 (33.3)	1.6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11.1 (-5.7)	-80.9 (-3.4)	-150.6 (-5.4)	-246.4 (-7.9)	-338.2 (-9.9)	-398.6 (-10.9)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GDP 대비 비율)	10.7 (0.6)	32.0 (1.3)	-10.9 (-0.4)	-75.1 (-2.4)	-140.6 (-4.1)	-176.4 (-4.8)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21.8 (-6.3)	-112.9 (-4.7)	-139.7 (-5.0)	-171.3 (-5.5)	-197.6 (-5.8)	-222.1 (-6.1)	

(1) 부담률 - 평가 및 정책방향

▶ 문제점

- 최근에 재정적자 지속,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 우려
 - 지출 증대요인 : 일반회계 복지지출, 국민연금, 건강보험
- 세대간 재분배 문제
 - 국민연금 : 세대간 재분배를 전제로 제도 형성
 -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여 배분,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미래세대 부담 증대
 - 건강보험은 연도별 재정균형을 맞춰가는 방식으로 운영
 - 고령화로 지출 증가, 부담률 상승 : 노년층 저율 부담, 미래세대 고율부담
 - 재정구조 개혁이 늦어지면 미래세대 부담 가중 →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

▶ 정책방향

- 중기적으로 관리재정수지 개선에 초점
 - (1) 재정지출 구조조정, (2) 조세체계 합리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 장기적으로 통합재정수지가 지속 가능하도록 부담률 제고
 - (1) 사회보험료, (2) 조세부담률 - 사회보험과 조세부담의 적절한 조화방안 모색

세번째 이슈

최근의 조세정책 평가와 시사점

- 효율성 문제

(2) 세수입 구조 : 법인세 의존도 높은 편

(3) 법인세 세율체계 문제

(2) 세수입 구조 - 최근의 변화

▶ 최근에 소득세 수입 비중 빠르게 증가

- 주요 국세 세목의 세수입 변화 추이(단위: 10억원, %)

	2013		2020		2013-2020 증가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가율
국세청세수입	193,363	100.0	295,401	100.0	102,037	100.0	52.8
소득세	48,383	25.0	98,238	33.3	49,855	48.9	103.0
법인세	43,855	22.7	55,513	18.8	11,658	11.4	26.6
VAT	59,091	30.6	83,008	28.1	23,918	23.4	40.5
3대 세목 합계		78.3		80.1		83.7	

주: VAT 및 국세청 세수입에 지방소비세 이체액 포함

(2) 세수입 구조 - 국제 비교

▶ OECD 국가 평균치와의 비교

- 소득세와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의 GDP 대비 비중 : OECD 평균의 60% 수준
- 법인세는 130%
- 재산과세는 222%
 - 재산과세 중 자산거래세(증권거래세 포함)와 상속증여세의 경우 각각 600%, 500%

▶ 세수입/GDP 비율(2020년, %)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국민부담	28.0	33.5	83.5
조세부담	20.1	24.1	83.6
사회보험료	7.8	9.4	83.3
소득세	5.3	8.3	63.9
법인세	3.4	2.6	130.8
일반소비세	4.2	7.0	60.0
개별소비세	2.2	2.9	75.9
재산과세	4.0	1.8	222.2
재산보유세	1.0	1.0	100.0
자산거래세	2.4	0.4	600.0
상증세	0.5	0.1	500.0

(2) 세수입 구조 - 평가 및 정책방향

▶ 평가

- 최근의 세수입 증가에서 소득세가 주도적 역할
 - 2013-2020년 국세청 소관 세수입 증가분의 48.9%가 소득세 증가분
 -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한편 아직도 다른 국가에 비해 법인세 부담의 GDP 대비 비율이 높은 편
 - 주요 세목 중 소득세, 사회보험료, 부가가치세의 GDP 대비 비율은 낮은 편

▶ 향후 세수입 증가도 소득세에 많이 의존해야 할 것으로 판단

- 효율성 측면에서 소득세가 (법인세에 비해) 우수한 편
- 향후 지출 증대 요인 - 소득재분배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 지출 증대
 - 소득세제도(누진세율체계 및 공제제도)와 재정지출의 조화를 통해 합리적 재분배 체계 형성
 - 부가가치세제는 대체로 비례적이거나 다소 역진적인 성격이 있다는 평가
- 공제제도 개편 등 과세체계 합리화를 통한 세수 증대 가능성

(2) 세수입 구조 - 평가 및 정책방향

▶ 법인세 수입 증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법인세는 자원배분 왜곡효과가 큰 세목
 - 한편,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법인세 부담률이 높은 편
- 최근에 부각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BEPS)는 법인세 세수 증대의 어려움을 시사
 - Inclusive Framework on BEPS의 Pillar 1(새로운 과세권 배분 방안)은 법인세 일부를 소비세화 하는 방안
 - Pillar 2는 최저한세를 15%로 규정할 예정, 15%에 수렴하는 수준으로 법인세율 인하 경쟁 가능성

▶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수입 증대 필요

- 부가가치세는 효율성, 공평성, 단순성 측면에서 우월한 세목
- 다른 국가에 비해 부가가치세 의존도 낮은 편
- 한편, 세율 조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 1976년에 도입 이후 10% 유지 - 세율이 10%를 넘어가는데 대한 납세자 저항 큼
 - 장기적으로 사회보험 개혁과 연계하여 세율 인상 방안 모색 필요

▶ 재산과세는 더 증세할 수 있을지 의문 : 최근의 과도한 증세에 대한 비판이 큼

(3) 법인세제도 - 현황과 문제점

▶ 최근의 법인세 세율체계 변화

구분		2008.1.1	2009.1.1	2010.1.1	2012.1.1	2015.1.1	2018.1.1	
일반 법인	과세 표준	3천억원 초과				22	22	
		3천억원 이하	25	22	22		25	
		2백억원 이하				20	20	20
		2억원 이하	11	11	10	10	10	10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21」, 2021, p. 97.

▶ 법인세 과세제도 문제점

- 4단계 세율체계 : 기업의 조세회피 행태 유발 가능성
- 최고세율 높은 편 -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 최고세율 27.5%(지방세 포함), OECD 회원국 중 11번째, OECD 평균 23.17%
 - 법인세 수입의 GDP 대비 비율 3.4%, OECD 평균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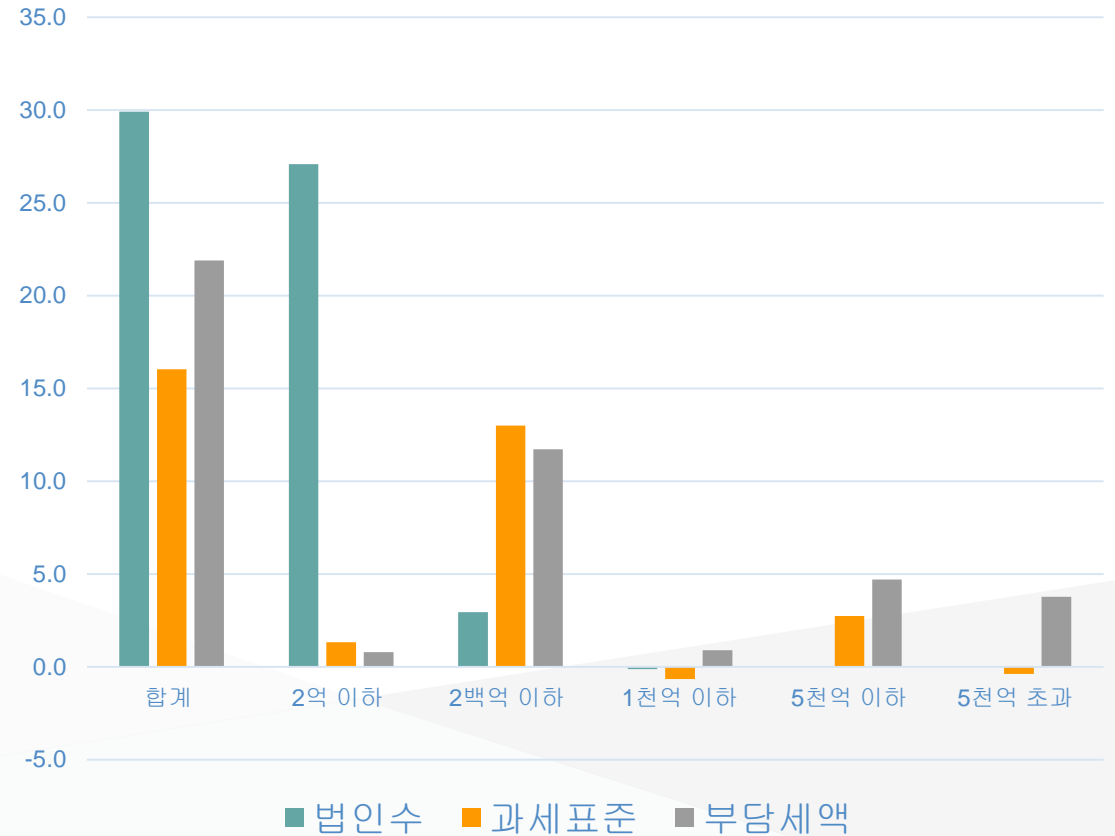
(3) 법인세제도 - 과표구간별 분포 변화

▶ 법인수, 과표, 세액 증가(단위: %, %p)

- 2016-2020년 변화분에서 각 구간의 변화분이 차지하는 비중

	법인수	과표	세액	평균세율 증가폭
합계	100.0	100.0	100.0	0.8
2억 이하	90.5	8.3	3.7	0.2
2백억 이하	9.8	81.0	53.5	0.2
1천억 이하	-0.4	-4.1	4.1	1.4
5천억 이하	0.0	17.1	21.5	1.4
5천억 초과	0.0	-2.4	17.2	2.1

증가율-법인수, 과표, 세액 증가율 (단위: %)



(3) 법인세제도 - 정책방향

▶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향

- 세율체계 단순화
- 높은 세율 인하
 - OECD/G20의 BEPS 논의에서 최저한세율을 15%로 설정한다는 합의(Pillar 2)
 - 15%가 조세경쟁의 하한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를 고려하여 세율체계를 개편할 필요
- 2022년 세법개정안
 - 법인세율 20%(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22%로 이원화
 - 중소, 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 적용

네번째 이슈

최근의 조세정책 평가와 시사점

- 공평성, 투명성, 단순성

(4) 부동산 과세제도

(5) 주식양도차익

(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4) 부동산 과세제도

▶ 최근의 부동산 과세제도 변화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조정대상 지역 내 2년 거주 요건 부여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요건 강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기본세율 +20%p), 3주택자 (기본세율 + 30%p)
 -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주택수별 차등세율 적용
 - 1주택자 : 0.5-2.0% → 0.6-3.0%
 -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공제
 - 조정지역 2주택, 그 외 3주택 이상자 : 1.2-6%
 - 과표적용율 인상 80% → 95%
-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4) 부동산 과세제도 - 평가

▶ 제도가 과도하게 복잡

-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과세 강화
 - 과도한 과세강화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한 다양한 특례조치 도입
-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 유도를 목적으로 주택 보유건수별 차등 과세
- 세무 전문가도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

▶ 공평성 문제, 조세회피 유도 (변칙 증여 등)

▶ 시장에서 드러난 부정적 영향

- 부동산 과세 강화와 주택 보유 건수에 따른 차등과세의 목적은 부동산 가격 안정, 다주택자 주택 매각 유도
 - 시장에서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등하고, 다주택자 주택 매각이 증가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음
- 부동산 과세 보완정책으로 임대차 3법 도입 - 임대료 급등

(4) 부동산 과세제도 - 정책방향

- ▶ 제도를 단순, 명확하게 하여 투명성 제고
 - 다주택자에 대한 특례 (중과제도) 폐지,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종합부동산세 등
- ▶ 세부담 완화, 다양한 특례제도 최소화
- ▶ 거주 주택 외 부동산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 임대소득 - 임대소득세
 -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5) 주식양도소득세

▶ 주식양도차익과세 관련 질문

- **공평성(fairness) 문제** : 주식양도차익과세를 폐지 또는 폐지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공평한가?
-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면 주식시장이 붕괴될 정도로 국내 주식시장이 취약한가?
- **과세 기술상의 문제** :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 증권회사와 세무당국의 IT 기술이 취약한가?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가?

▶ 금융투자소득세제 장기 발전방향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대폭 축소 필요**
 - 투자자산간 과세 공평성 문제 : 이자, 배당에 대한 과세, 기타 투자자산에 대한 과세 체계 고려
- **세율체계 단순화 – 단일세율 체계가 적합**
 - 조세회피 문제 고려
- **장기적으로 이자, 배당, 양도차익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방안 모색**

(6) 건강보험료 – 부과체계

▶ 납세자 입장에서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같음

-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혜택,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차등 납부
- 한편 부과대상은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
 - 근로자 – 총급여
 - 지역가입자 – 종합소득세(연금소득 포함), 재산

▶ 투자소득에 대한 차별적 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

- 연금소득의 이중과세 문제
 - 근로 당시 총급여(연금 기여금 포함), 퇴직후 연금소득에 대해 부과 – 소득세는 기여단계에서 비과세
 - 연금소득은 연금 기여금과 기여금으로부터 창출된 이익의 배분액 –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 이중부과
- 연금 외 투자의 경우
 - 채권 : 원금을 제외한 이자에 대해서만 부과
 - 주식: 배당소득은 부과대상, 투자원금과 양도차익은 제외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그 외 재산: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 부과

(6) 건강보험료 – 문제점과 개편방향

▶ 문제점

- 공평성 문제
- 제도의 복잡성
- 부담 회피 노력 유도

▶ 정책방향

- 제도의 단순화 및 공평성 확보 필요
 - 근로자와 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종합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 연금소득의 경우, 이중부과 방지 장치 도입
 - 양도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검토

다섯번째 이슈

최근의 조세정책 평가와 시사점

- 형평성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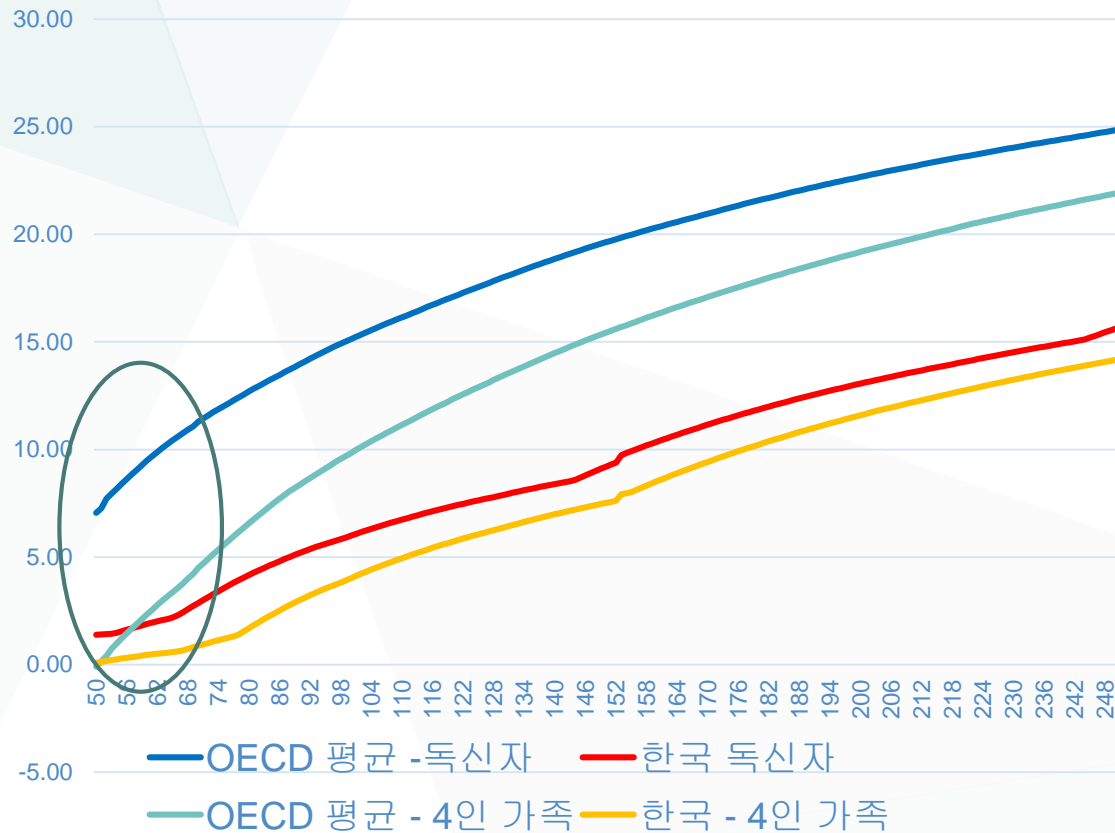
(7) 소득세

(7) 소득세 제도 - 최근의 세율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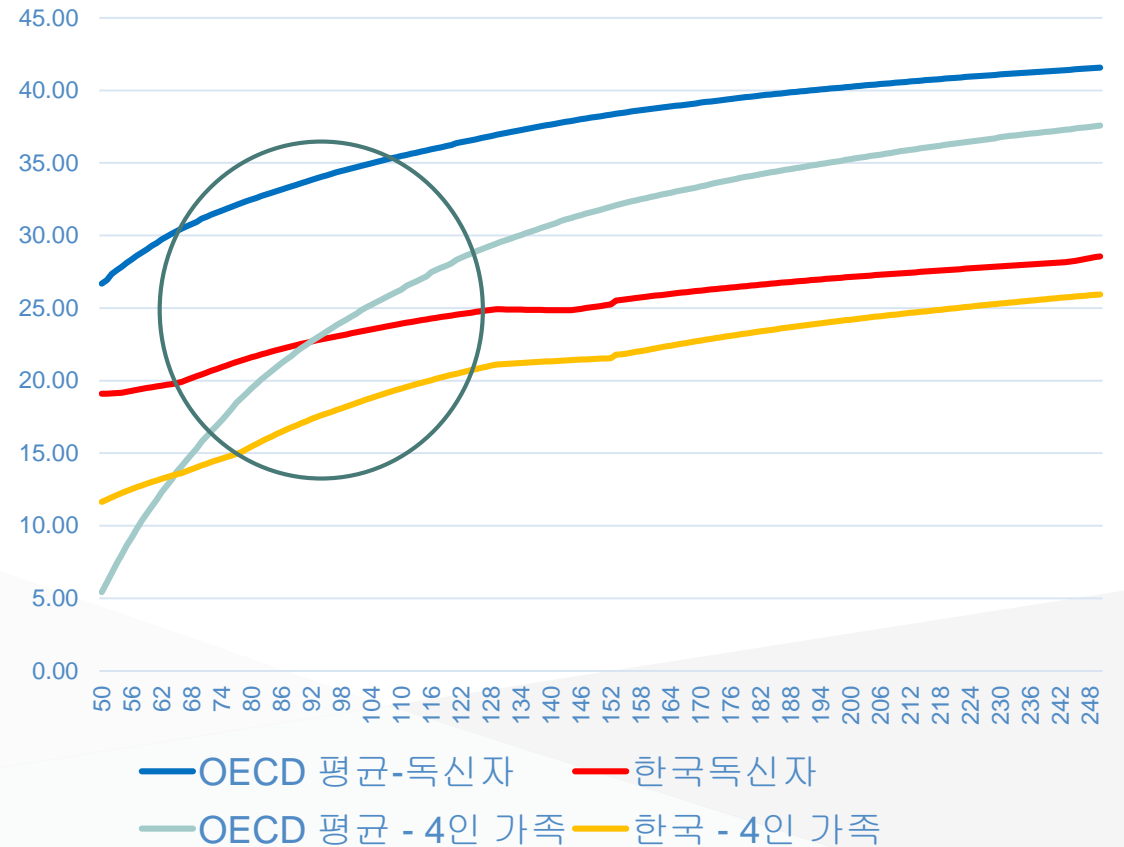
과세표준	2016	2017	2018~2020	2021
1,200 이하	6	6	6	6
1,200~4,600	15	15	15	15
4,600~8,800	24	24	24	24
8,800~15,000	35	35	35	35
15,000~30,000	38	38	38	38
30,000~50,000			40	40
50,000~100,000		40	42	42
100,000 초과				45

(7) 소득세 제도 -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구조

소득세 실효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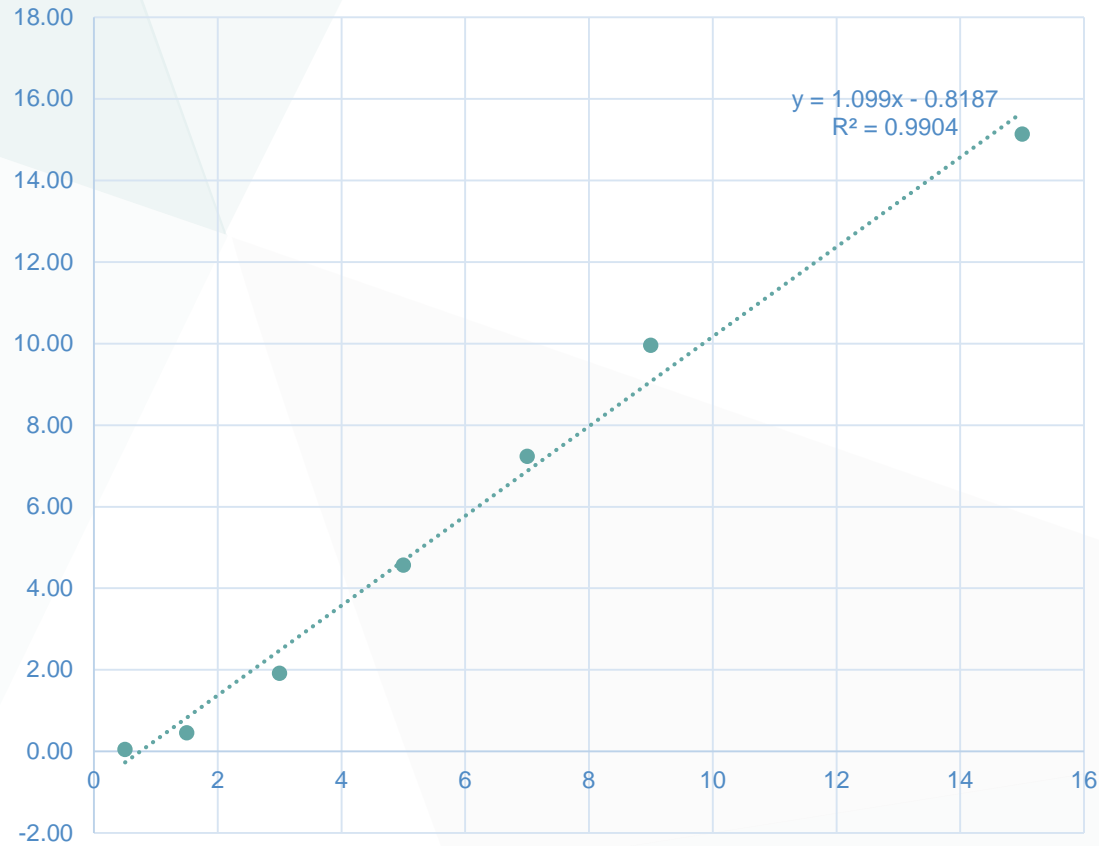


조세격차(Tax Wedge) - 소득세, 사회보험, 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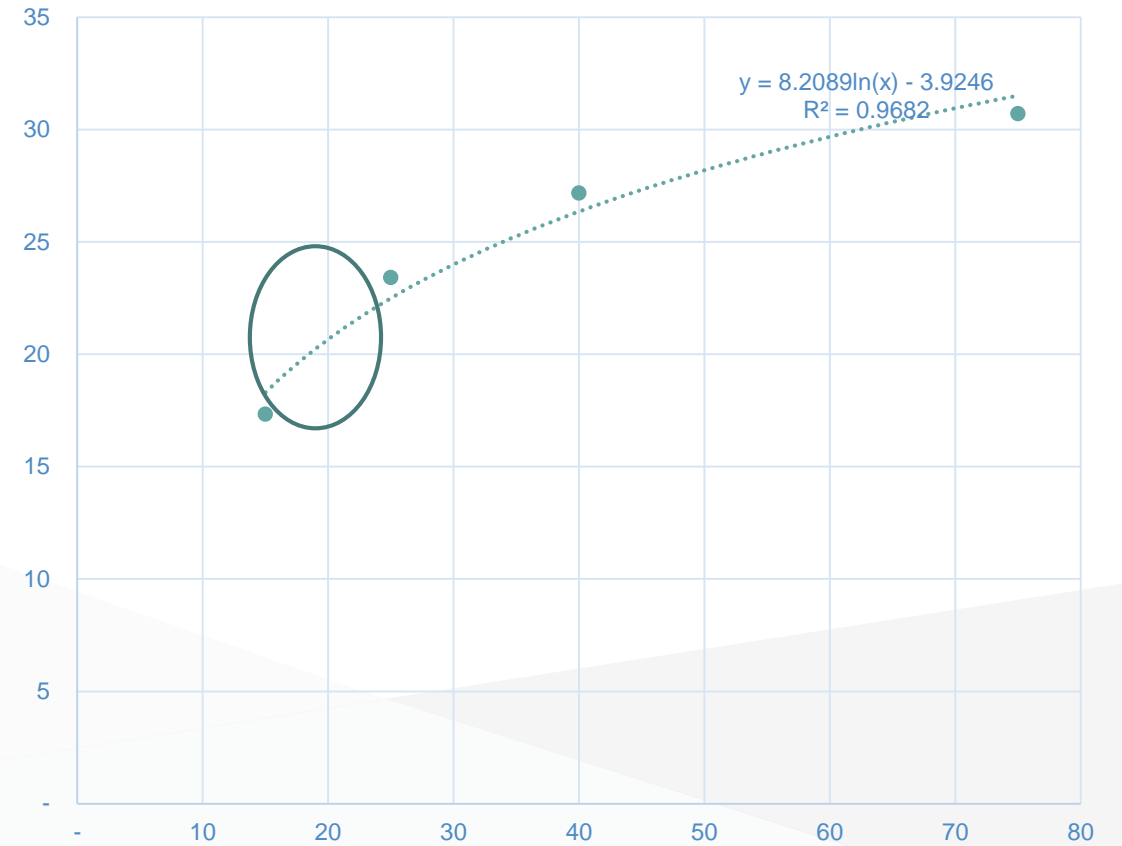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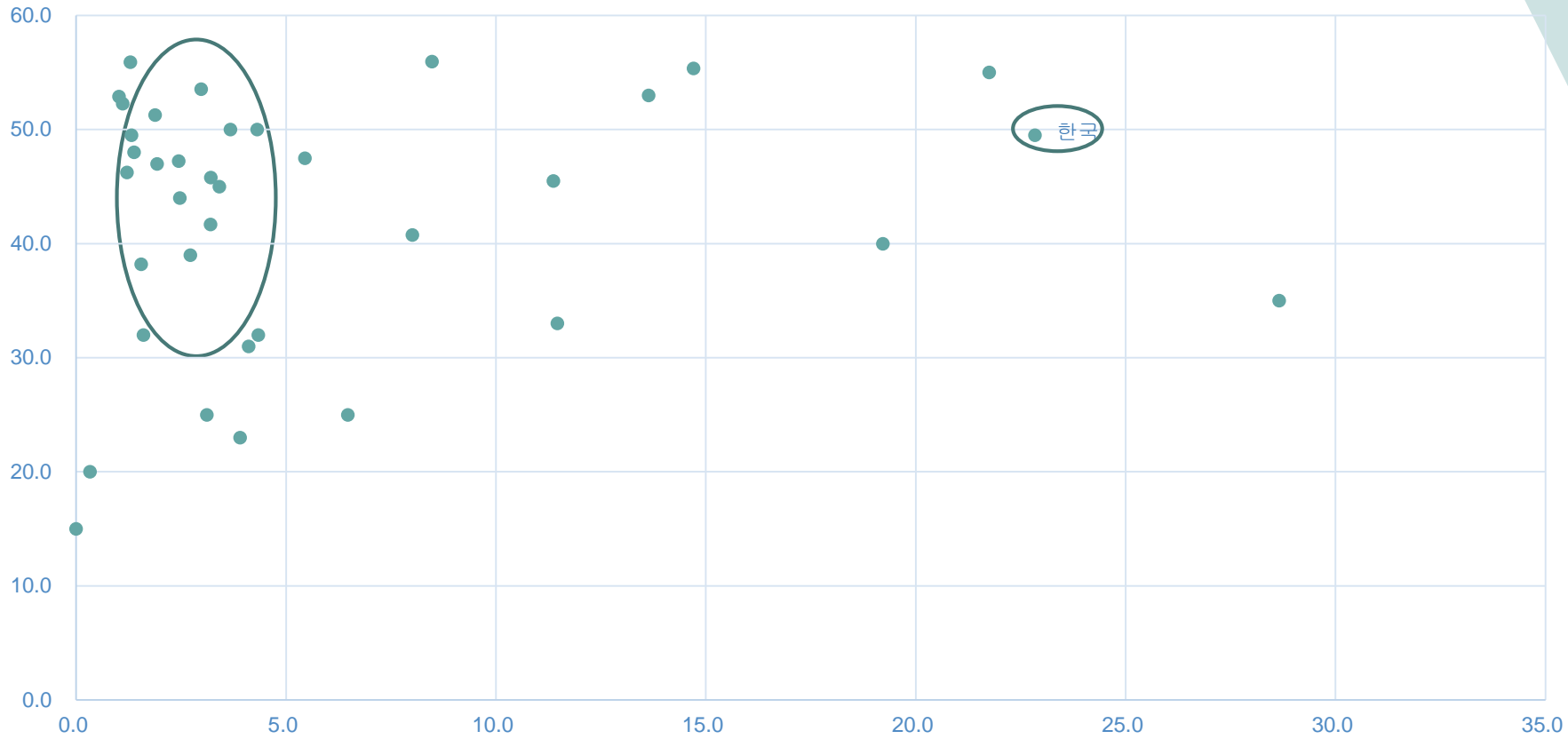
(7) 소득세제도 -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한국 2020년

실효세율(소득 1억 5천만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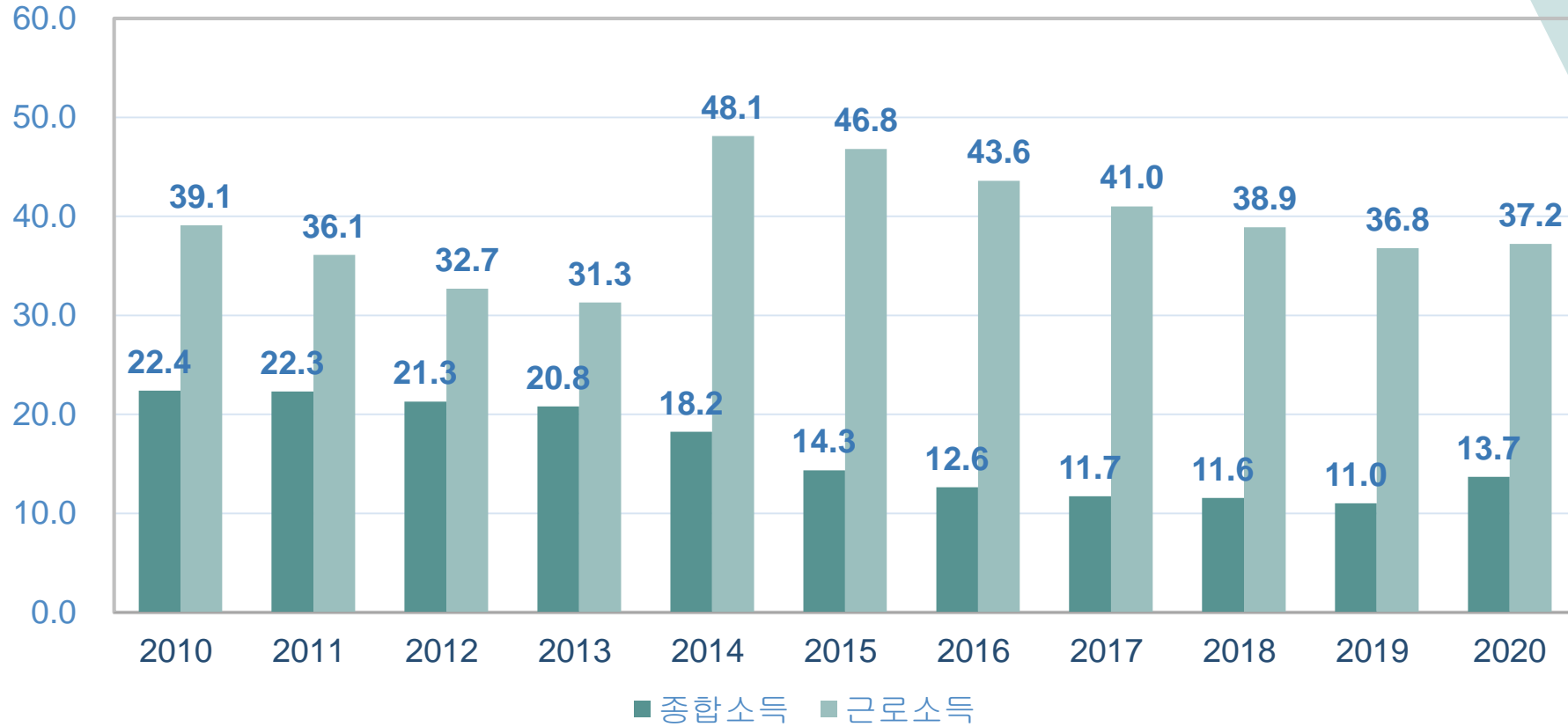
실효세율(소득 1억5천만원 이상)





최고세율과 최고세율 적용기준

- X축 : 최고세율 적용기준 (평균임금(한국 4천7백만원)의 배수), Y축 : 법정 최고세율 (지방세 포함)
- 한국(2021년 22.8배)은 최고세율 적용기준 상위 2번째 (첫번째 멕시코 35%, 28.7배)
- 대부분 국가에서 평균임금의 5배 이내에서 최고세율 적용 시작, 절반 정도는 3.6배 이내에서 최고세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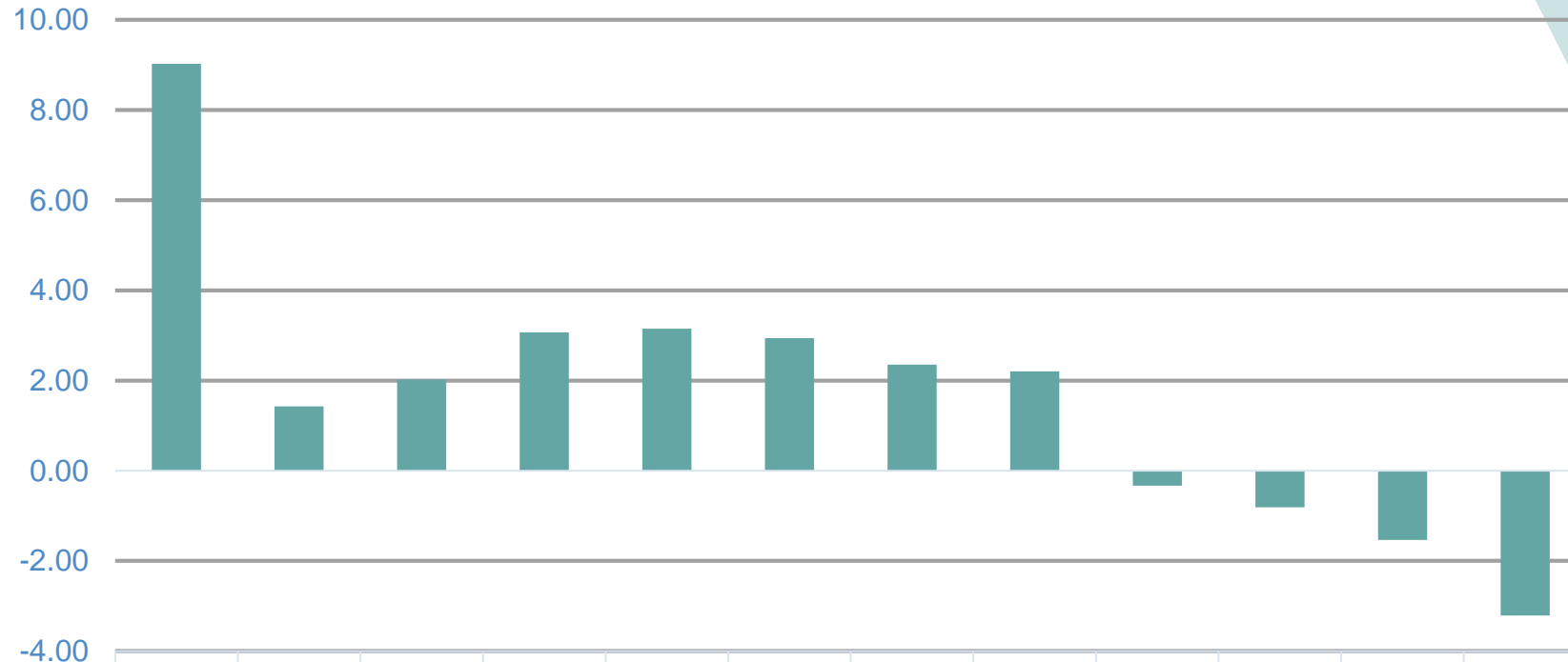


면세자비율 변화 추이

면세자 비율 = 결정세액이 있는 자/총신고인원 (%)

면세자 비율 지속적 하락세, 2020년에는 다소 상승

근소세 면세자 비율 2014년에 크게 상승한 이후 매년 2%p 내외 하락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격차 (단위 : %p)

실효세율 격차 = 종합소득세 실효세율 -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실효세율 격차 평균 9.03%p, 최대 구간 4천만-6천만원 3.15%p, 최소 구간 10억 초과 -3.21%p

소득 2억원 이하 구간 : 종소세 실효세율 > 근소세 실효세율, 소득 2억원 초과구간은 반대

(7) 소득세제제도 – 현행 제도의 특징 (1)

- ▶ 전반적으로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이 다른 국가(OECD 평균치)에 비해 낮은 편
 - 저세율 구간에 비해 중간소득 구간에서 격차가 큰 편
- ▶ 최고세율 적용 기준이 높음
 - 최근에 소수의 초고소득자에 적용되는 세율 중점적으로 인상
- ▶ 조세격차(tax wedge) 구조 – 재분배 효과 상당히 낮음
 - 조세격차: 세금, 사회보험료, 보조금(-)이 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 사회보험료 단일 요율 – 누진성 완화
 - 저소득 구간, 자녀 부양을 고려한 보조금이 적은 편

(7) 소득세제제도 – 현행 제도의 특징 (2)

- ▶ 독신자와 4인 가족의 세부담 격차 상당히 작은 편
 - 특히, 평균소득 이하 구간의 조세격차를 보면 한국과 OECD 평균치와의 차이가 큼
- ▶ 면세자 비율 높은 편, 지속적 감소세
 - 세율구간, 공제액을 물가를 반영하여 조정하지 않고 유지하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연 2%p 정도 감소
- ▶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의 실효세율 격차
 - 소득 2억원 이하 구간 2-3%p 정도, 소득 2억원 초과구간 종합소득 실효세율이 더 낮음

(7) 소득세제제도 – 정책방향 (1)

▶ 세수입 증대를 위한 과세기반 확충

- 보편적 과세를 위해 중간계층부터 세부담 증대 : 공제체계 및 세율체계 개편

▶ 가족 친화적 세제

- 각종 특별공제 최소화, 인적공제 중심의 공제체계 형성, 각종 특별공제 최소화

▶ 지출정책(보조금)과의 조화 → 상호 대체 및 보완적 관계 고려

- Tax(세금)-benefit(보조금) 분석을 바탕으로 조세격차(tax wedge)를 염두에 두고 세제와 보조금 제도 정책방향 설정
 - 예, 기초연금 vs 경로우대공제

(7) 소득세제제도 – 정책방향 (1)

▶ 사업소득-근로소득 과세형평성 제고

-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특별공제 폐지, 축소
- 근로소득 비과세 축소 :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출산·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 등 재검토

▶ 물가상승의 반영

- 조세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

여섯번째 이슈

그 외 중장기 조세정책 이슈

- (8) 부가가치세
- (9) 상속증여세

(8) 부가가치세제

▶ 정책방향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세수입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세율 인상
 - 조세저항이 강하므로, 세수 증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 가능
 - 예, 일본은 사회복지 지출 목적으로 소비세율 인상
 - 세율 인상을 위한 세율체계 이원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
 - 또한 행정의 복잡성 및 비효율성 초래 예상
 - 조세회피 유도
- 면세범위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간이과세제도 필요한지 재검토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편화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 IT 기술을 활용한 신고제도 간소화 가능

(9) 상속증여세 – 문제점

▶ 상속세 유산과세 방식

▶ 높은 세부담

- GDP 대비 상속세 비중 0.54%(2020년), OECD 회원국 중 프랑스, 벨기에(각각 0.65%)에 이어 세번째
- OECD 회원국 평균 0.14%

▶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와 소유자 이전에 따른 자본이득 과세 혼합

- 자산 취득가액이 아니라 상속, 증여시 시가 기준으로 상속, 증여세 부과
- 양도자산별 차이 고려하지 못함
 - 예, 예금은 양도차익이 거의 없는 한편 부동산은 양도차익이 큰 경우
 - (1) 부동산 양도 후 증여와 (2) 증여 후 양도시 세부담 차이
- 세율과 공제규모 설정에 기준이 되는 원칙 설정에 혼란

(9) 상속증여세 - 정책방향

- ▶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 ▶ 자본이득(양도소득)과세와 자산의 무상이전(취득)에 대한 과세의 분리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자산별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적용
 -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산 매각 시점으로 이연하는 방법 허용
 - 이 경우, 가업상속에 대한 과세 문제 없음
 - 무상이전(취득)에 대한 과세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준 반영
 - 복권 등 무상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참조

일곱번째 이슈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요약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요약

▶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기본원칙

- 세수입 확보, 효율성, 공평성, 형평성, 투명성, 단순성

▶ 세수입 확보 정책 방향

- 중기, 관리재정수지 개선 : (1) 재정지출구조조정, (2) 조세체계 합리화
- 장기, 통합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부담률 제고: (1) 사회보험료, (2) 조세

▶ 효율성 제고 방안

- 소득세 중심의 세수기반 확충
 -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증세 검토
-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 : 최고세율 인하, 과세구간 축소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요약

▶ 공평성, 투명성, 단순성 확보 방안

- 부동산 과세제도 단순화
 - 중과제도 폐지, 다양한 특례제도 최소화, 세율 인하
 - 거주 주택 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 – 임대소득, 양도소득
- 주식양도소득세 : 공평성 확보 방안 모색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순화 및 공평성 확보

▶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소득세의 보편적 과세를 위한 공제체계 및 세율체계 개편
- 가족친화적 방향으로 공제체계 개편
- 지출(보조금)정책과의 조화
 - tax-benefit 분석을 바탕으로 세제와 보조금제도의 조화 방안 모색



고맙습니다